

- 2011년도 고령자 세대의 연평균소득은 307만엔으로 이 가운데 67.5%가 공적연금에 해당
 - 전체 고령자 세대 중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세대가 7.3%, 연금소득이 총소득의 80~100%인 세대가 63.5%인 가운데 연금소득이 총소득의 60% 미만인 세대는 18%에 불과
-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저금리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보장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 세대주 가구의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활용이 필요함.
- 가구당 저축잔고는 세대주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·무직 세대의 약 90%는 사회보장급여로 수입을 충당
 - 장래 사회보장급여액이 감소하게 되면 가처분소득 부족분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의 이용이 불가피

Ⅲ. 주체별 고령화 대책

1. 금융기관

- 은행들은 정부가 「고령사회백서」를 처음 작성한 1996년 이후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인 연금보험 및 종신보험, 신탁은행과 제휴한 상속관련 업무(유언신탁 및 유산 정리 업무)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도 나오기 시작
- 신탁은행의 경우 개인 연금신탁과 같은 기존 상품 이외에 일본 최고재판소의 제안을 받아 ‘후견제도 지원신탁’과 관련된 상품을 2012년 2월부터 취급